

< 2025년 11월 14일 국회의사당 제5회의장(본청 220호)에서 개최된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1차 회의 발제자료 >

2025년 3월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평가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연금연구회 리더)

요약

2025년 3월 20일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 건 **“개혁을 가장한 개악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대가로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된, 개혁 논의를 시작하기 전의 국민연금 부과방식 보험료, 즉 기금이 소진된 이후의 매년 부담 수준이 **36.6%**이었다. 그런데 제도 개편 이후에는 **39.4%**로 치솟았다. 최근 논란이 되는 65세로 조만간에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부과방식 보험료가 **41.1%에 달하고, 누적적자는 179조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여러 지표들이 시사하는 바는, 미래세대 부담을 더 늘린 개악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두고서도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 발제 종료 후에 자문위원들은 손을 들고서 본 발제자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오늘 밤샘 토론할 준비도 되어 있다. (발제자가 이처럼 강하게 주장하는 논거로, 지금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제도 개편 이후, 이전 국민연금제도보다도 **부과방식 보험료가 더 늘어난 내용에 대한 일본 정부기관 전문가의 해명 요청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회 미래연구원 주최 연금 관련 세미나에서의 본 발제자 토론문도 참조하기 바란다.)

요약 (계속)

단순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만 다루는, 소위 말하는 **모수개혁 논의조차도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국민연금보다 재정 불안정이 훨씬 더 심각한, 즉 제도 지속 가능성이 0%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바꾸는 논의, 즉 구조개혁 논의를 하기 위해 출범한 22대 국회 연금특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 처음 가동을 시작한 자문위원회의 발제자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구성된 연금특위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를 못하고 있다!! 특위 논의를 심층적으로 지원할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가 **특위 기한 만료 직전인 2025년 11월 14일에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에서는 22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일단 6개월이라도 연장하는 것이, '3월 20일 연금개정안 평가'에 앞서 먼저 결정해야만 하는 일의 우선순위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용을 찬찬히 음미해 보면, 그 실상이 '계약안'임에도,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조차도 개혁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의 이 참담한 사실 왜곡 현실**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를 포함한 모든 자문위원회 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함으로써, 논란 발생시 즉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회의는 녹취에 기반하여 상세 회의록을 작성**하되, 회의 개최 직후 1차 버전은 즉시 공개, 최종 수정 버전은 1개월 이내에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도록 강제화해야 한다!!!!

그 내용에 근거하여 자문위원회의 논의 내용들이 국민과 언론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연하자면 특위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세대간 상생이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과 자문위원회가 **합동회의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식으로 운영된 전례도 많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 또 그 해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해소위원회” 역시 모두 **합동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야만 국회 속기록을 통해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 진정 누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지?? 누가 공적연금 강화란 이름으로 후세대를 착취하는 데 앞장서 왔는지를 **역사적 사료로 명확하게 남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발제문 목차

1.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 논의 절차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문제점들
2.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청년층 입장
3. 복지부의 연금법 개정 설명 내용에 대한 외국 전문가의 평가
4.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평가
(2025년 3월 24일 오전 10시. 연금연구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내용)
5. 그렇다면 바람직한 연금개혁 논의 방향은?

<부록>

- 부록 1.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이 국민연금 재정과 GDP 대비 연금 지출액 비중에 미치는 효과
- 부록 2.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 전후 **미적립부채 변화 추이**
- 부록 3. 연금연구회의 2025년 3월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내용
- 2025년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

1.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 논의 절차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문제점들¹⁾

작년 3~5월은 국민연금 개혁이 큰 사회적 이슈였다.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위원회와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가 각각 2023년 가을과 2024년 봄까지 1년 정도 운영되었다. 본 발제자는 양 위원회에 재정안정방안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참여했다. 양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본 발제자가 제안했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 15%까지 인상”하는 안을 압도적으로 찬성했었다.

전문가들 판단이 이러하였음에도, 국회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너무도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연금 문제에 대해 학습하기 이전에 비해 오히려 후세대 부담을 대폭 늘리는 안을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시민대표단 결정 과정에는 두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거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 ‘연금개혁청년행동’이 개최한 줌 세미나(300명 이상 참여)에서도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청년층들이 국회 공론화위원회 논의과정과 내용을 “대국민 사기”라고 까지 비판하는 이유는 다음 두가지 때문이다.

첫째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하기 위한 모집단인 1만명에 ‘공적연금 강화란 명목으로 연금액을 더 올리는 안’을 선호하는 시민이 더 많게 설계했다는 점이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시민대표단이 반드시 알아야만 할 중요한 자료를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당초에는 그 자료를 포함하여 시민대표단 학습자료를 인쇄했었음에도, 이 내용들을 삭제한 후 다시 인쇄하여 시민대표단을 학습시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였다(국회 연금특위 여당간사인 유경준 전 의원 보도자료). 삭제된 내용 중에는 시민대표단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안을 따를 경우, 2005년생과 2035년 생의 생애(Life-time) 보험료 부담 차이가 21%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는 중요 사항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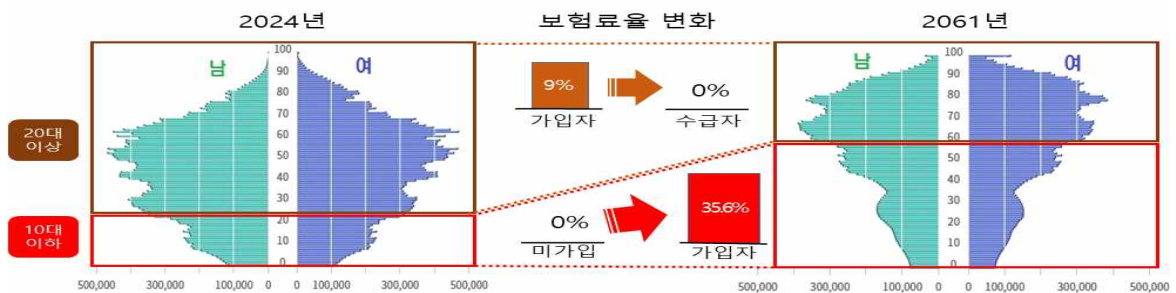
당시만 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동결되어 있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안을 채택할 경우 2078년에 부과방식 보험료가 43.2%까지 치솟는다는 사실도 당초 인쇄되었던 자료에 있었다. 이 내용을 삭제한 후 다시 인쇄한 책자로 시민대표단을 학습시켰다. 그러니 연금개혁청년행동이 국회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대국민 사기’라고 칭하는 것이다.

2024년 4월 이후 2025년 3월 20일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시점까지, 이처럼 시

1) 윤석명의 미래노동개혁 토론회(2024. 11. 29). “정년연장, 연금개혁 논점 중심으로”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였음.

민대표단의 제대로 알 권리를 철저히 왜곡시키면서 도출된 시민대표단의 의사 결정이 마치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호도해 왔다!! 위대한 시민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1년 이상 연금개혁 논의가 행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이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이었다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청년층들이 분노하면서 제대로 연금개혁을 다시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모수 개편안별, 세대간 평균보험료율(부과방식비용률 적용 시) 부담 비교>
 보험료 13% - 소득대체율 50% 안



2024년 연령대	현재 보험료율	2061년 보험료율 (기금소진 시점)	2078년 보험료율 (최대 보험료 납부 시점)
20대 이상	9%	0%(수급자)	0%(수급자)
10대 이하	0%(미가입)	35.6%(부과방식비용률)	43.2%(부과방식비용률)

자료 출처: 복지부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의 윤석명 진술문.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 강화 방향”에서 재인용

국회 공론화위원회 논의는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연금 논의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망국적인 포퓰리즘이 근원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빌미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현재는 41.5%이나 2028년까지 40%로 하락할 예정이었다.** 이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산정된다. 그런데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향후 50년 뒤에 가서도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7년 전후로 예상되고 있다. 40년을 가입해야 소득대체율 40%가 적용되는데, 실제로는 30년도 가입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고 **주장해 왔었다.** 그것도 인생 100세 시대에서 출생율이 0.7대인 나라에서 말이다.

2.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청년층 입장

많은 논쟁 끝에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더 내고 더 받

는', 즉 보험료율과 연금 소득대체율 수치를 바꾼 모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국민 연금법 개정에 대한 세대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개정안을 주도한 50대 이상 연령층은 역사적인 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반면에, 20~30대로 대표되는 청년층은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 청년층 입장에 대한 구글 AI 브리핑 (2025년 11월 13일 오전 11시 57분 인출)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층 입장

◆ AI 개요

▶ +5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주요 입장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과, 개혁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입니다. 청년층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어 수혜를 누리기가 어렵고, 소득대체율 인상 혜택은 기성세대에게 집중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연금 제도 자체의 신뢰도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제기하며,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청년층의 주요 입장

- **더 내고, 더 받는 것은 청년이 아니다:** 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더 내는 것은 청년 세대이고, 더 받는 혜택은 기성세대에게 집중된다고 비판합니다.
- **부담 가중 및 세대 간 불평등:**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반면,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더 늦어지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 **개혁 과정의 불투명성:**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었고, 의견 수렴 과정도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개혁안에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현재 연금 제도와 개혁안이 미래 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며, 이는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기존 세대의 희생 부족:** 개혁안이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반면, 기성세대의 양보나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

출처

https://www.google.com/search?q=%EC%97%B0%EA%B8%88%EA%B0%9C%ED%98%81%EC%97%90+%EB%8C%80%ED%95%9C+%EC%B2%AD%EB%85%84%EC%B8%B5+%EC%9E%85%EC%9E%A5&source=hp&ei=GkYVae2qHf_l1e8Piay3iAE&ifsig=AOW8s4IAAAAAaRVUKrZO0sx9VGOQzTPkzhSvP3eRAtE&ved=0ahUKEwjtn8bnje6QAxX_cvUHHQnWDREQ4dUDCBA&uact=5&oq=%EC%97%B0%EA%B8%88%EA%B0%9C%ED%98%81%EC%97%90+%EB%8C%80%ED%95%9C+%EC%B2%AD%EB%85%84%EC%B8%B5+%EC%9E%85%EC%9E%A5&gs_lp=Egdnd3Mtd2l6lifs17DquijqsJztlHsl5Ag64yA7ZWclOyyreuFhOy4tSDsnoXsnqUyBRAhGKABMgUQIRigAUjFS1AAWPQ-cAJ4AJA BAJgBhQGgAZefqgEENS4zMbgBA8gBAPgBAZgCHKAC9xbCAGsQABiABBixAxiDAcICBBAAGAPCAggQLhiABBixA8ICBAAAGIAEGLDwglREc4YgAQYsQMY0QMYgwEYxwHCAgsQLhiABBixAxjUAsICBRAAGIAEwglFEC4YgATCAGsQLhiABBjRAXjHAcICBRAAGO8FwgIIEAAYogQYiQXCAGgQABiABBiiBMICBxBhGKABGAqYAwCSBwQ1LjIzoAfekAGyBwQzLjIzuAf0FsIHBzE3LjEwLjHIBx0&sclient=gws-wiz

나. 청년세대 당사자들의 목소리 1

- 청년세대가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인 줄 아십니까?



청년세대 국민연금 기자회견,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나요?" / KNN



KNN NEWS
구독자 107만명



2.5만



공유

저장



조회수 94만회 7개월 전 #국민연금 #연금 #knn뉴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D7zNq8mPKB0>

다. 청년세대 당사자들의 목소리 2)

연금법 통과 이후 본 발제자가 이끌어가고 있는 연금연구회는 7월 16일 동국대에서 8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 세미나에 참가했던 청년층의 반응이다. 학보사 기자인 전태영 영남대 학생은 “미래세대가 살아갈 사회를 기성세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박준영 경희대 대학생은 “(기성세대는) 겨우 몇 년 조금 더 내는 게 아쉬워서 아들딸, 손자 손녀를 40년 동안 국가의 ATM기로 만들어 놓고서 박수를 친다”고 비판했다. 학보사 기자인 오승리 동국대 학생은 “청년세대는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예술가로 활동 중인 양정아씨는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과 ‘넌 만큼 돌려받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 2026 대한민국 대전망(케이박스, 2025년 10월 발간)의 “27. 연금, 국민연금 참 구조개혁으로 세대간 형평성을”에서 인용하였음.

라. 왜?? 청년세대들은 분노하는가!!!

a. 청년세대에게겐 개악인 연금제도

2025년 3월 개정된 국민연금제도는 70년 후인 2095년까지를 재정평가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금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보고 있다. 2065년 이후의 부과방식 보험료는 최대 39.2%로 추계하고 있다. 2001년에 태어난 청년은 2065년이 되면 보험료의 50%인 19.6%를 월급에서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더구나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5년 더 연장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41%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록 3의 재정추계 결과를 참고하기 바람)

기금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한 것이 개혁이라는 정치권, 주요 언론의 보도와 달리,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늘린 희대의 개악인 것이다. 개혁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보험료 인상의 중단기 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5년 현재 25세인 젊은 세대에게 이번 연금개정을 적용해 보자. 이 연령층은 향후 40년, 즉 2064년까지 보험료를 납부만 하고, 2065년에 가서야 처음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정작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해부터는 기금이 소진되어, 보험료를 39% 이상으로 올려야만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 세대별 형평성 악화

2026년에 소득대체율은 즉시 3% 포인트 인상되나, 보험료는 8년에 걸쳐서 서서히 인상되다 보니, 50세 이상 연령층이 이번 개악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 반면에 25세 가입자는 향후 40년 뒤인 2064년까지는 보험료만 납부한다. 25세 연령층이 향후 40년 꼬박 납부할 보험료가 국민연금 재정개선 효과로 나타나지만, 정작 연금을 받아야 할 2065년부터는 연금소진으로 재정이 크게 악화되게 된다. 40년 보험료 납부 효과는 내년부터 즉시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40년이 지나서야 처음 나타나는 국민연금 작동원리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실체다. 이번 개정이 단기 모르면 효과만 부각시키며 국민과 언론을 기망했다고 혹평하는 이유다!!!

3. 복지부의 연금법 개정 설명 내용에 대한 외국 전문가의 평가³⁾

최근 일본 정부기관 연구자가 발제자에게 보내 왔던 이 메일 내용 일부다.

Re: 면담 희망(와타나베 유이치)



Yuichi_Watanabe <yuichi_watanabe@ide.go.jp> 09.10 15:50 [210.130.202.132, Japan]

받는 사람: 윤석명

윤석명 박사님께,

이번 연금개혁의 내용이나 과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좋습니까?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60000>

만약 다른 것들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타나베 유이치 드림.

해당 메일에서 일본 정부기관 소속인 '와타나베 유이치'란 분이 언급했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용이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60000>

<일본 연구자의 날카로운 질문>

 투자수익률의 수상한 변화 개편 전 4.5%, 개편 후 5.5%로 1%p 상향. 왜 기준을 바꿨습니까?	 미래 세대 부담 증가 2079년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36.6%에서 39.2%로 2.6%p 상승했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재정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가정을 조작한 것 아닙니까?
--	---	--

출처: 친절한 서기자. “개혁인가, 개악인가?” 2025년 연금개편, 한 일본 학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드러난 진실. <https://m.blog.naver.com/suhangi/224061282214?recommendTrackingCode=2>

3) 2025년 10월 29일 개최된 국회 미래연구원 주관 세미나 중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편전략”에 대한 본 발제자의 토론문에서 인용하였음.

이번 개혁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은?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시, 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
 - 기금은 현행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2007년 개혁: 기금소진 연도 13년 연장(2047→2060년)
 - 누적적자는 경상가 기준으로 6,973조원 감소 예상(~'93)
-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 기대

대안별 재정 전망

구분	기금소진	필요 보험료율(%)		수지균형 보험료율(%)	현행 대비 누적 수지적자
		최고('79년)	'93년		
9·40 (현행)	2056년	36.6	31.2	19.7(+10.7%p)	-
13·43	2071년(+15년)	39.2	33.6	21.2(+8.2%p)	-6,973조원

- * 필요 보험료율 : 한 해 급여액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그 해 보험료율
- * 수지균형보험료율 : 확정된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40년 가입 - 25년 수급)
- * 기금투자수익률 : 현행 4.5%, 13·43은 5.5% 적용
- * 현행 누적 수지적자(~'93, 경상가) : 2경 1,669조원

일본 연구자가 가장 궁금해했던 점은,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재정상태 비교에서 **개정 이전의 기금 투자 수익률은 '현행 4.5%', 개정 후인 '13·43'에서는 왜?? 5.5%를 적용했느냐였다.** 부연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특히 법개정 전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19.7%에서 21.2%로 1.5% 포인트가 더 늘어나고, 2079년 부과방식 보험료도 36.6%에서 39.2%로 2.6% 포인트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 개편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정안정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또한 현행, 즉 제도 개편 이전 국민연금 제도 대비 누적적자가 6,973조원 감소한다는 비교가 타당하냐는 질문도 있었다. 부연하자면 누적적자 감소 폭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금 투자 수익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이러한 일본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본 발제자는 모두 타당한 질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전 제도와 바뀐 제도의 재정효과, 즉 '누적적자 감소폭'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동일한 투자 수익률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4.5%이던, 아니면 5.5%이던 말이다. 특히 부과방식 보험료율과 수지균형 보험료가 제도 개정 이후에 더 늘어나는 그 지표들은,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으로는,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정년 연장 논의를 반영할 수 있어야, 제도 개편의 재정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64세로 5년 연장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밝힌 누적적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며, 또 67~68세로 이미 정년을 연장한 국가들 사례를 대입한다면, 오히려 제도 개편 이후에 누적적자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 국민연금법 개정 전후 누적적자 변화 추이>

구 분	기금투자 수익률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부과방식 비율 (최대)	현행대비 누적수지 적자 규모	GDP 대비 총지출 (최대시점)	수지균형 보험료율
9%-40%	4.5%	2041년	2056년	36.6%('79)	2경 1,669조원	8.7%('81)	19.7%
64세 연장		2040년	2054년	38.3%('81)	+4,230조원	9.9%('80)	
13%-43%	4.5%	2048년	2064년	39.4%('79)	-3,779조원	9.4%('82)	21.2%
64세 연장		2046년	2062년	41.2%('81)	+179조원	10.7%('82)	

주: 기존 국민연금 제도(보험료 9%-소득대체율 40%) 뿐 아니라, 3월 20일 개정된 국민연금제도(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는 정년 5년 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으로 5년 더 국민연금에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179조원이 더 늘어나게 되어, 후세대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국회 연금특위 내부 자료

4.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평가

(2025년 3월 24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연금연구회 국회 소동관 기자회견 내용을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연금연구회 긴급 성명서 “대통령 대행의 연금 개악법 거부권(재의권 요구)을 촉구합니다!”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청년층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대간 불공평을 심화시키며, 더 지속이 불가능하게 개악을 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 첫째, 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규정입니다.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니 청년층은 연금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

지입니다.

- 문제 핵심은 누가 연금지급보장의 책임을 질 것이냐에 있습니다.
 - 법 조항만 만들어 놓고서, 정작 **청년세대가** 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서는 연금 줄 돈이 없다면, 실상은 청년세대를 한번 더 기망하는 셈이 됩니다.
 - 50세 이상 연령층의 연금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지급보장 조항이 악용되고 있음에 청년층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 실효는 없으면서도 적기 연금개혁의 방해가 될 뿐인 지급보장조항 대신, 청년층이 연금 받을 돈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연금개혁이 지금 필요한 이유입니다.

- 둘째, 작년 9월 정부의 연금개혁 내용 관련입니다.
- 고심 끝에 마련된 정부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청년층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연령별 보험료 차등 부담안’이 있었습니다.

- 세대 간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두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여·야·정 협의에 참여했던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의 핵심조치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 정부안의 핵심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재논의가 불가피한 배경입니다.

- 셋째, 청년세대가 빠진 채 논의된 연금개혁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 이번 연금개편안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청년세대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청년세대가 수긍할 연금개혁 내용이어야만, 정치적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청년세대가 배제된 상태에서, 청년층에게 너무도 불리한 내용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 청년층 불만이 커지는 것입니다.

-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청년세대 참여가 배제되다 보니, **연금개**

혁의 철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원점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 넷째, 크레딧 추가 소요재정 감당 방안 관련입니다.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대폭 강화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재정이 대폭 투입될 크레딧 소요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현재의 크레딧 제도조차도 전체 소요 비용의 70% 이상을 후 세대에 전가하고 있어서입니다.

○ 크레딧 확대라는 생색만 내면서, 정작 막대한 소요재원은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덤터기 씌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날 크레딧 소요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없는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3월 20일 연금연구회 기자회견 참고 자료>

□ 정부 공식 국민연금 재정추계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료

□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7%'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함.

□ '소득대체율 30%-보험료 12%'조차 재정안정 달성이 어려움.

- 2070년 기금이 소진되고, 부과방식 보험료가 26.5%에 달해서임.

□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의 실상

□ 2025년 2,060조원인 (국민연금 지급 부족액인) 미적립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료를 21.2%로 올려야 함.

□ 국회 통과한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은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다 보니, 재정 불안정이 더욱 심해지게 됨.

□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소진 시점 9년 늘렸다고 자화자찬함.

- 일시에 보험료를 13%로 올려도 2050년 미적립부채가 6,159조원(GDP 대비 119.2%)으로 급증

- 실상은 2095년 4경 2,032조원(GDP 대비 311.4%)로 증가함.

□ 이번 연금개편의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나누어짐.

□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평균수명을 90세로 가정하다 보니, 2064년으로 소진 시점이 연장된 이번 개편안은, 50세 이상 연령층이 사망할 때까지 안심하고 연금 받을 수 있는 기간임.

□ 반면에 이번 개편으로 젊은층과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커졌음.

- 그대로 두면 2078년 부과방식 보험료가 35%인데,

- 이번 개편으로 인해 3% 포인트나 더 높은 38%로 올라가기 때문임.

□ 젊은 세대 불안 덜어주려고 시작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오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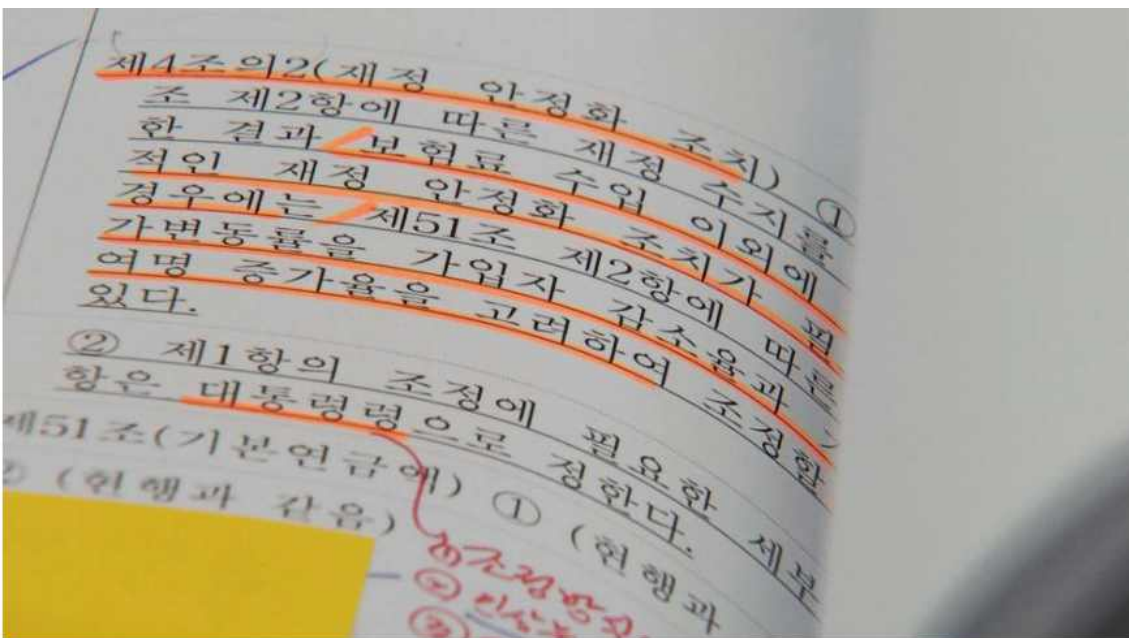
□ 50세 이상 연령층 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음.

□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더 키우다 보니, 청년층이 분노하는 것임.

5. 그렇다면 바람직한 연금개혁 논의 방향은??⁴⁾

22대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논의해야 할 주요 의제 및 진정한 연금개혁 방향

-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가 2월20일 국회에 보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 일부. / 제공=김미애 의원실

4) 2026 대한민국 대전망(케이박스. 2025년 10월 발간)의 “27. 연금. 국민연금 참 구조개혁으로 세대간 형평성을”에서 인용하였음.

출처: MTN 뉴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로 2030세대 불안 해소해야" [여의도 교차로 ⑥]. 2025년 11월 7일.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110714385135762> 에서 2025년 11월 13일 오전 10시 50분 인출

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방향 - 자동조정장치 도입

청년들의 거센 분노에 당황하여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한심해 보인다!! 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연금 사각지대 축소 차원에서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이 제시되는 대책들이라서 그렇다. **이 대책들이 종국에는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확대에 소요될 재원 상당액을 현세대가 아닌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면서도, 그 생색을 현세대가 내고 있어서다!!

<진짜 해법: 제대로 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

01 즉각 작동하는 한국형 자동조정장치 정부가 제안한 일본식 방식은 10~20년 후에나 작동합니다. 당장의 세대 간 불평등만 키웁니다.	02 연금 수급자: 매크로 슬라이드 즉시 적용 내년부터 당장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03 연금 가입자: 기대여명계수 도입 핀란드식 기대여명계수로 늘어나는 수명만큼 재정 불안을 방지합니다.	04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 OECD 권고대로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입니다.

출처: 친절한 서기자. "개혁인가, 개악인가?" 2025년 연금개편, 한 일본 학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드러난 진실. <https://m.blog.naver.com/suhangi/224061282214?recommendTrackingCode=2>

이번 연금 개악을 당장에 뒤집을 수 없다는 우리 현실을 감안한다면, **내년부터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불가피하다.** 수급자의 고통 분담이 가능한 일본식 매크로 슬라이드 개념의 자동조정장치와 함께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는 **중간단계의 자동조정장치인 핀란드식의 기대여명계수 (Life-expectancy Coefficient) 채택이 불가피한 이유다.**

기대여명계수는 생애 연금지급 총액은 동일하나, 수명 증가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연금수급기간 만큼만 매월 연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노동시장 개편을 통한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전제로, 기대여명계수 작동과 함께 연금 가입 상한과 수급 연령을 연계시킬 경우 핀란드식의 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지라도

연금액 하락 방지가 가능해진다. 현재 핀란드 운영 방식 그대로 하면 된다.

나. OECD 선진국처럼 100% 소득비례 연금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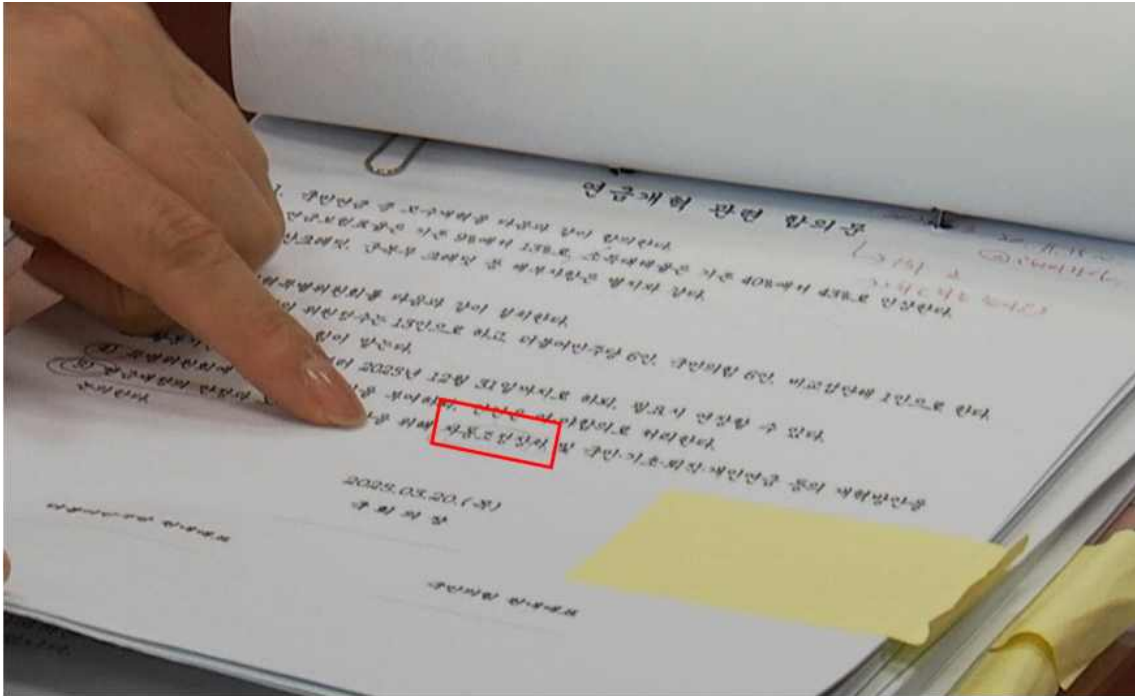
대다수 OECD 회원국들처럼 국민연금을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하루빨리 전환시켜야 한다. 그렇게 구조개혁을 해야만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OECD 사무국은 한국의 기초연금이 투입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적다는 점을 들어 기초연금 개편을 권고해 왔다. 현행 기초연금에서는 빈곤하지 않은 노인과 빈곤한 노인이 동일한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다수 OECD 국가들처럼, 하루빨리 소득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상자를 줄여 기초연금 재정을 절감하면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중간 이하 저소득층의 국민연금액 감소분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기초연금의 성격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개편해야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및 국민연금 인정소득 기준을 높여 연금을 더 받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64세까지 5년 연장할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 포인트(Percentage로는 10%)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 구조개혁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년층들이 공적연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개혁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이미 발생한 2,060조원(GDP 대비 84.8%)의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를 모두 국가가 책임진다 해도, 개정된 '43%-13%' 조합에서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를 현 수준에서 멈추게 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21.2% 보험료를 걷어야 한다. 2033년에 가서야 보험료가 13%로 인상되다 보니, 2033년 이후에도 매년 8.2% 포인트 적게 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그러니 청년층들은 '낸 만큼만 받는 제도'로 하루빨리 개편하라고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22대 국회 연금 특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만 하는 이유다.



연금 개혁 합의문 초안에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제공=김미애 의원실

출처: MTN 뉴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로 2030세대 불안 해소해야" [여의도 교차로 ©]. 2025년 11월 7일.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110714385135762> 에서 2025년 11월 13일 오전 10시 50분 인출

라. **당장, 이 시점에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국민연금 의무 납입연령 연장 중심으로⁵⁾

본 발제자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연금제도가 한 세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정 세대는 부담한 것 대비 몇 배나 더 받아가면서도, 그 부담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대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의 운영 실태라서 그렇다.

전 세계 국가들, 적어도 우리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처럼 무책임하게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은 이미 26년 전인 1999년에 자신이 낸 만큼만 받아가는 제도로 모든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했다. 그로부터 26년 후인 지금에 와서도 이 나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도 참담하다!!

대다수 언론을 포함하여 상당수 정치인들은 후 세대에게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즉 **미적립부채(Unfunded liability)**를 떠넘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

5) 윤석명의 미래노동개혁 토론문(2024. 11. 29). “정년연장, 연금 개혁 논점 중심으로”에서 인용하였음.

고 있어서다. 이러한 행태를 저명한 경제학자인 바스티아(F. Bastiat)는 **법적약탈 (Legal plunder)**라고 칭했다. 앞선 세대가 지속 불가능한 연금제도를, 연금법으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후세대로부터 약탈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발제자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퇴직연령을 일치시켜 놓치 못한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자 한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연금 정책을 결정하는 대다수 교수와 관리들이 **그동안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들어 일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소득절벽을 겪기 시작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다** 보니, 이제 이 문제가 빠르게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대다수 전문가들 역시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니 호되게 비판받아야 한다!! 10여년 전부터 본 발제자가 그렇게 강조해 왔었음에도 **그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아 논의가 무산되어왔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봐야 할 대목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서 과연 몇 %가 정년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느냐다.** 발제자는 25% 미만으로 알고 있다. 정년연장이 이루어진다면 정년연장 논의를 주도하는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와 공공기관 등 소위 **괜찮다**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주된 수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 OECD가 권고해 온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의 공고화, 가뜰이나 심한 노인 빈곤과 노인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기회를 5년 후로 연기시키게 되면서 취업 기회 역시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OECD가 개선을 권고해 왔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문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현 상태에서의 단순한 정년연장은 바람직한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는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퇴직연령이 곧 연금수급연령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젊은층과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대안은 “일본식의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해 보인다.** 노동조합 등에서 요구하는 정년연장은 청년층의 취업 빙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직무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 예를 들자면 203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처한 제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적절해 보인다.

퇴직 후 재고용으로 퇴직 전 임금의 약 70~80%를 지급하고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퇴직 전과 동일하게 제공한다면, 소위 말하는 극히 일부의 금수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근로자는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만 64세로 5년 연장한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약 13% 정**

도 인상될 수 있다(OECD 2022년 보고서). 최소 10% 이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퇴직 후 재고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적연금 강화다. 장기적으로 일본이 이미 하고있는 것처럼 “70세까지 고용확보 조치 의무”까지 적용한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 이상 인상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서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자는 황당한 주장들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1석 4조의 효과



월급과 퇴직금 5년 연장

근로자들이 5년 더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기간이 늘어납니다.



실질 소득대체율 5%p 상승

퍼센티지로는 10% 이상 증가 효과. 연금 수령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납니다.



청년과 일자리 나누기

세대 상생의 방안이 됩니다. 청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막지 않습니다.



재정 안정성 확보

의무납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재정이 안정화됩니다.

주: 국민연금 수지균형을 맞추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납입기간이 5년 늘어날 경우에는, 이미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위에 적시된 내용과 달리,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처: 친절한 서기자. “개혁인가, 계약인가?” 2025년 연금개편, 한 일본 학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드러난 진실. <https://m.blog.naver.com/suhangi/224061282214?recommendTrackingCode=2>

인생 100세 시대, 출생율이 0.7인 나라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 오래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18년 양행 구리야 OECD 사무총장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보고서 중에 있는 내용이다. “한국 노인은 평균적으로 72세 전후까지 일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본 받아야 할 보물같은 현상”이다. 문제는 오래 일하는 노인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 즉 Decent한 Job을 통해 일하는 만큼 제대로 보상받게 하는 시스템, 그것이 반드시 청년 연장이 될 필요는 없다. 현재 우리 시점에서 제일 적합한 대안을 찾으면 된다. 그것이 다른 아님 퇴직 후 재고용이다. 물론 사용자 역시 생산성이 유지되는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망국적인 연금 포퓰리즘을 어느 정도라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서다!!!!

<부록>

부록 1.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이 국민연금 재정과 GDP 대비 연금 지출액 비중에 미치는 효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금 지출액 비중이 여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이유는 우리 국민연금의 제도 미성숙에 기인한 상대적으로 연금수급자 수가 적은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첫째 국민연금 예상 가입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둘째 공적연금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서이다. 2023년 시행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재정추계를 예로 들자면, **향후 70년 뒤인 2093년에 가서도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은 59세로 설정되어 있다.**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이미 65세 전후로 의무납입연령이 연장되어 있다. 우리 국민연금 역시 2033년에 수급연령이 65세 연장될 예정이다.

언제까지 마냥 (사용주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의무납입연령을 59세로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이 일치한다. **적어도 10년 이내에 우리 국민연금의 의무납입연령도 만 64세로 5년 연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이 5년 연장된다면, 그 5년에 해당되는 만큼의 연금 지출액이 늘어나게 되어, GDP 대비 연금액 지출 비율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재정추계결과에 근거하여 여타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연금지출액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

< 현행 및 대안별 재정전망 >

구분	구분		기금소진 시점	필요보험료율 ¹⁾ ('78년 기준)	현행대비 누적수지 적자 규모 ²⁾ (경상가, ~'93)	GDP 대비 총지출 ('83, 최고)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현행	9%	40%	2055년	35%	-	9.5%
1안	13%	50%	2061년 (+6년)	43.2% (+8.2%p)	+1,004조원	11.8% (+2.3%p)
64세 연장	13%	50%	2059년 (+4년)	45% (+10%p)	+5,676조원	13.5% (+4%p)
2안	12%	40%	2062년 (+7년)	35.1% (+0.1%p)	-4,598조원	9.6% (+0.1%p)
64세 연장	12%	40%	2060년 (+5년)	36.6% (+1.6%p)	-833조원	10.9% (+1.4%p)

1) 필요보험료율: 한 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 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
 2) 누적수지는 기금소진 시점부터 추계기간 말('93년)까지 연도별 수지를 누적하여 계산
 * 의무가입연령은 현 59세에서 2025년 이후 2년마다 1세씩 상향 가정

출처: 아세아경제 (2024년)

상기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 조합에서 의 무납입연령을 64세로 5년 연장할 경우, GDP 대비 연금 지출액 비율이 2083년 9.6% 에서 10.9%로 1.4% 포인트나 증가한다. 우리가 비교하는 OECD 평균 대비 GDP 대비 연금 지출액 비중이 최소한 이만큼 과소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43% + 기금투자수익률 4.5% >

(단위 : 경상가,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지차 (총수입 - 총지출)	부과방식 비용률	GDP 대비 급여지출
2025	1,166,633	65,342	7.2	1.9
2030	1,559,774	83,450	9.5	2.5
2040	2,444,664	72,885	15.6	4.1
2048	2,694,462	-9,502	22.2	5.6
2050	2,636,830	-35,302	23.6	5.8
2060	1,258,511	-246,482	31.6	7.3
2064	-45,846	-379,942	34.3	7.9
2070	-	-478,009	36.6	8.5
2080	-	-652,867	39.4	9.2
2090	-	-736,052	35.2	9.0
2093	-	-743,021	33.8	8.7

출처: 국회 연금특위 내부 자료

<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43% + 기금투자수익률 4.5% + 가입연령 64세 >

(단위 : 경상가,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지차 (총수입 - 총지출)	부과방식 비용률	GDP 대비급여지출
2025	1,169,608	68,037	6.8	1.9
2030	1,575,100	86,133	9.2	2.6
2040	2,499,930	70,278	15.6	4.4
2046	2,694,187	-1,954	21.0	5.8
2050	2,515,105	-70,432	24.5	6.6
2060	523,649	-334,496	32.6	8.4
2062	-258,078	-409,418	34.3	8.8
2070	-	-568,535	38.3	9.8
2080	-	-765,245	41.1	10.5
2090	-	-853,770	36.9	10.1
2093	-	-852,711	34.9	9.8

출처: 국회 연금특위 내부 자료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연장됨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율-소

특대체울 조합'에서도 누적적자 수지가 4,598조원에서 833조원으로 3,765조원이나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을 반영하여,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할 경우에는, 부과방식 보험료가 최대 4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제도 개편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연금 전문가라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록 2.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미적립부채 변화 추이

시나리오	연도	법 개정 이전	법 개정 이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소득대체율		40%	43%	43%	43%
보험료		9%	13%	13%	13%
투자 수익율 가정		0%	0%	1%	1%
자동조정장치 (2054-)		x	x	x	o
자동조정장치 (2036-)		x	x	x	x
미적립부채(단위: 조원)	2025	2,060	1,973	1,943	1,820
	2050	6,332	6,159	5,541	4,970
	2095	54,545	42,032	27,702	22,648
미적립부채 (% of GDP)	2025	84.8	81.2	80.0	74.9
	2050	122.5	119.2	107.2	96.2
	2095	404.1	311.4	205.2	167.8

출처: 연금연구회 소속 한양대 전영준 교수가 국민연금 개편 대안별 미적립 부채 변화 추이를 활용하여 제대로 된 개혁의 진위를 가리는 논쟁에 연금연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추정한 자료임.

상기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추정치에 대한 발제자 입장은 다음과 같다!!

3월 20일 국민연금 개편의 후과, 즉 향후 70년 뒤인 2095년의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 GDP 대비 311.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다 보니, 이런 제도 개편으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 졌다는 점이다!!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국민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을 향후 70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가정보다 1% 포인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가정 (즉 희망 고문 가정)할 지라도, 2095년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GDP 대비 205.2%에 달해 이 역시 지속이 불가능한 대안임을 알 수 있다.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시점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도 거세게 도입을 반대했던 당시 정부 제안의 자동조정장치(일본식 매크로 슬라이드 개념)을 2054년부터 도입한다고 할 지라도,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GDP 대비 167.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역시 지속 불가능한 제도로 판명된다.

위의 미적립부채 추정 결과는, 가급적 빨리 그것도 제대로 된, 즉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그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만 국민연금 제도 존속이 그나마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부록 3. 연금연구회의 2025년 3월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내용
- 2025년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

<발언자 1>

연금연구회는 청년, 중년, 장년, 노년세대로 구성된, 연금 관련 분야 전문가, NGO와 시민들이 모인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지속이 불가능한 우리 연금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후 세대에 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뭉쳐진 **연구모임**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제도가 유지될 수 있어야 **청년과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가** 있어서입니다.

연금연구회 리더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국민연금 개편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연금연구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것으로 보이는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 또는 그와 거의 유사한 안은 재정 안정방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7%’** 조합을 채택할지라도 재정안정 달성이 어려워서입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일시에 10% 포인트나 삭감하는 안이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상상하기조차도 하기 싫을 **‘소득대체율 30%-보험료 12%’** 조합을 채택할지라도 재정안정 달성이 어렵습니다. 2070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2070년 부과방식 보험료가 **2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입니다.

타협안으로 거론되는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을 채택할 경우,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인) 미적립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당장 **21.2%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억지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통과시킬 것 같은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은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다 보니, 재정 불안정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시에 보험료를 13%로 올릴지라도 2050년에 미적립부채가 **6,159조원**(GDP 대비 119.2%)으로 급증하고, 2095년이 되면 미적립부채가 **4경 2,032조원**(GDP 대비 311.4%)까지 늘어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3%’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70년 후에 국민연금 (2055년 기금이 소진된 이후 매년 적자가 쌓이는 금액의 합계인) 누적적자가 **4,000조원** 넘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수치는 **‘눈가리고 아웅’** 또는 **‘연발의 오줌누기’** 그 자체입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적게 내는 그만큼** 연금 빛이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요 국가들 대다수는 이미 **의무납입연령을 65세 또는 67~68세까지** 연장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국부펀드 2위**의 국가인 **노르웨이**는 2010년대 초에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본인이 원할 경우) **75세까지 연장**시켰습니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2093년의 **평균수명을 90~91세로** 가정한 대한민국에서, 향후 **70년**이 지날 때까지도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9세로** 가정하여 추계한 자료에 근거해서, **누적적자가 줄어든다는** 수치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과 연론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서도 국민연금에 고작 27년 정도만 가입하고, **나머지 기간인 70여년을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겠다!!**, 즉 부양받을 것이라는 가정을 채택하고 있어서입니다.

우리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아무리 **낙관적인 가정**치를 적용할지라도, 초장기적으로 의무납입연령을 67세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에서는 **누적적자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지속이 불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라고 했더니, **알량한 눈속임으로 후세대에게 부담을 더 떠넘기면서도, 개혁이라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연론을 한번 더 우롱하는 셈**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자동조정장치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연명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호흡기**라서 그렇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운용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동조정장치 기본 정신은 **‘세대간 고통 분담을 통한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했던 보험료 수준과 자신들이 받을 연금액 사이에 그 어떤 밀접한 연관성도 없는, 소위 말하는 확정급여 연금지급방식(DB, Defined Benefit)이 초래할 **망국적인 위기상황**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연금제도의 숨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할 마지막 남은 보루가 자동조정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단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지라도 **제대로 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안정을 일부 달성할 수는 있겠으나, **그 고통 대부분을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어서입니다**. 주요 OECD 회원국들처럼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즉 모든 국민연금 이해 관계자들이 똑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합의조건으로 내건 연금지급보장 명문화는 계약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계약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보장 명문화조항 도입이 그럴싸하게는 들리나 **현재 연금 계약을 주도하고 있는 586세대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서 그러합니다!!!

먼저 연금지급보장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법 조항**입니다. 2000년대 초 도입된 공무원연금 지급보장조항으로 인해, 올해 즉 **2025년 한 해에만 국민 세금으로 약 10조원의 적자**를 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지급보장조항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의 **최대 장애물임이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급보장조항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 연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건어서 연금을 주면 된다고들 하는데, **그 세금은 누가 낼 겁니까?** 연금지급보장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들은, 지난 27년 동안 정작 자신들은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1% 포인트라도 올리는 것조차도 반대**해 왔던 분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뻔뻔한 모습**을 보고서는, **벼룩조차도 대한민국에서는 낫짝**을 내밀기조차 힘들겠다고 토로할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왜? 그리스**가 **고액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시에 50%나 삭감**했었겠습니까? **줄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지급보장 조항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치 청년층과 미래세대를 위하는 척, 불안을 덜어주는 척하고 있으나, 이를 핑계로 자신들만 연금 더 받아먹고 저세상으로 떠나겠다는, 죄송하게도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현재 50대 이상 연령층들이 “자신들만 연금 더 받아먹고서 튀겠다”**는 그런 나쁜 수단, 즉 눈속임 수단일 뿐입니다!!

고작 보험료 3%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부담하고서, 자신들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서 **10년** 동안이나 **월급 대비 70%**나 되는 엄청난 수준(소득대체율)의 연금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받을 세대들이, 저세상으로 떠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자기들 받을 연금 몫을** 챙기겠다고, ‘**지급보장 명문화**’ 규정까지 들먹거리고 있기 때문이어서입니다. 지급보장법 만들어 냈으니, 청년층과 미래세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대들도 우리처럼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말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요구합니다!! 국민연금이 처한 이 처참한 사실들은 숨긴 채, **밀실에서 진행되는 정치권에서의 연금개약 논의를 당장에 멈추기 바랍니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대로 연금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OECD 회원국으로서, 또 출산율 0.7대 국가가 채택한 연금개편안으로서 국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연금연구회는 요구합니다!!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정 설정을 전제로 한 재정추계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우선적으로 공개한 후에** 연금개편 논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동조정장치, 그것도 **모든 세대가 고통을 부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호가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긴급상황에서의 산소호흡기일** 뿐입니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불안을 덜어준다는 취지의 연금지급보장 명문화 조항은** 오히려 미래세대를 더 힘들게 하는, **아니 우리 국민연금을 회복이 불가능한 제도로 전략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연금연구회가 천명하는 바입니다.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이 서두르지 말고,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꼼꼼하게 따져본 뒤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